

2000년 노동운동을 돌아본다



· 때: 2000. 12. 9(토) 오후 4시
 ·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
 · 정리: 윤호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

·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 김태현 민주노동 정책기획실장
 노진규 한국노동 정책본부장
 임영일 경남대학교수 사회학

이원보 올해 노동운동 역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만, 작년에 겪었던 일들이 되풀이 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들어서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계 투쟁이 기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전력노조의 파업 철회로 주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의 주요 흐름부터 짚어 봅시다.

임영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올 한해를 일관되게 관통한 축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우자동차 사태가 있었고,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금융노조 파업과 공공부문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반기에 정부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 와중에 혼란을 겪던 경계가 하반기에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고요. 정치

적으로는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다시 굳어졌고,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노동에 미친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겁니다.

노진권 한국노총의 경우 일단투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여러 문제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큼니다. 원래 작년 12월 겨울투쟁의 요구조건, 즉 IMF 원상회복, 임금격차 해소를 올해 일단투를 통해 관철시킬 계획이었죠. 경제위기 속에서 침체되었던 제조업 노동운동이 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7월 있었던 금융노조 파업은 요구의 관철정도 보다는 필수공익사업인 은행이 파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무기가 파업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투쟁이었죠. 98년 1차 구조조정 때 부분파업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도부가 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게 하루파업을 성공시키는데 주요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는 몇몇 건에서 공동보조를 취했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활동에서 공동안을 제출했고, 최근 양대노총 공동투쟁 테이블도 좋은 예입니다.

임교수님 지적하셨듯 올해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투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가 구조조정 추진 3년차인데, 정부는 내년 2월 마무리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

명하고 있습니다. 노조 역시 강하게 저항했지만, 정부의 공세 속에 노동운동이 한계를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특히 전력노조 사태를 재기를 정부가 자신감을 획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올해를 지나면서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정부는 노동계를 사회적 교섭상대가 아닌 틀러리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은 반발했고,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한 데 반해,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있는 등 정부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리대응이 상당히 진행된 한해였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일단투 마무리 이후 자행된 6월 29일 롯데호텔과 7월 1일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정부 노동정책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 역시 실제 내용을 갖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적 언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악화되는 빈부격차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지요.

이원보 운동은 객관적인 제약조건을 주체 역량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 주체의 투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 일단투에서 노동쟁의건수가 급증하고 쟁의규모 역시 커졌는데요, 올해 투쟁의 특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

을까요?

노진귀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노총 차원의 임단투는 계획대로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경제실정의 책임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조합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박인상 위원장이 여당에 들어가는 등 지도력에 혼란이 오면서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파업이 지금까지 250건 이상 있었는데 작년 190건보다 늘었고, 임금관련 파업은 줄어든 데 반해 구조조정관련 파업은 늘어났습니다.

김태현 민주노총은 올 임단투를 상반기 총파업 전술과 결합해서 추진했습니다. 성과라던 IMF 원상회복,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쟁점화 하는데 일정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도 이뤄냈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일정한 성과를 냈습니다. 총파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노동시간단축 연내 이행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말이 다 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하반기 투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조합원의 투쟁력과 투쟁의지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막는데는 실패했고, 내년에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올해 임단투의 또다른 특징은

장기파업 사업장이 많다는 점입니다. 98년과 99년에는 큰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올해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용자가 87년 이전의 의식수준을 갖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와 무지막지한 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분부마다 이런 사업장이 네 다섯 개씩 됩니다.

이원보 상급단체로의 교섭권 위임과 공동교섭 등 산별교섭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다?

김태현 이 문제는 산별노조 전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내는 등 산별노조 중심의 교섭으로 성과를 얻었고요, 대학노조 역시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단체의 물이 해 등으로 산별교섭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초보수준을 못 벗어난 듯 합니다.

임영일 이 건으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의 주력군인 금속산업연맹의 올해 투쟁기조는 산별교섭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별교섭보다는 산별조직 체계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했고, 투쟁은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발맞추었습니다.

노진귀 한국노총 산하에서 3월 금융과 4월 택시가 산별로 전환했습니다. 금융은 산별차원의 파업을 성공시켰고, 산별단합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과거 금융노조가 집단교섭 경험을 가졌고, 각 은행의 사용자가 사실상 정부라는 단일 사용자였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줍니다. 물론 임금협약은 아직 산별교섭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산별차원의 집단교섭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본지금융'이 철폐되고 은행간 경쟁이 격화되면 산별교섭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보 올해 임단투는 구조조정투쟁과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대우자동차, 금융,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투쟁이 전개되었고,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구조조정투쟁 전략에 대해 평가해봅시다.

임영일 노동운동이 제기한 쟁점들이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올해 임단투는 구조조정투쟁과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 금융,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투쟁이 전개되었고,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화되는 과정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공기업화 요구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가 노동조합의 반론을 압도해 버린거지요,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라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폐쇄대상이 포드나, GM이나 하는 문제로 얽히면서 노동조합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늘어지면서 해당 노조 역시 내부 동력을 모아내지 못

했고요.

더군다나 경제위기가 바람을 타면서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는데, 이게 노동조합의 대안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정부의 구조조정이 신자유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야당 역시 신자유주의의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더욱 힘을 얻었지요. 하여튼 노동운동이 자기 대안을 사회이론화 하는데는 한계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노진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관에 대한 민의 거부감 같은 게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방만한 것도 맞구요. 철밥통, 고임금, 높은 명예퇴직금 등 제조업노동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내부에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입장이 나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원래 생각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여론몰이도 주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노조가 아무리 공공성 훼손을 이야기해도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지요. 이점에서 노동운동이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이익을 위해 투쟁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이익 위해 투쟁하거나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 하는거죠. 더군다나 과거 제조업노동자들이 어려웠을 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원한 적도 별로 없어요. 연대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공부문 노조의 싸움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원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란 게 만만치 않은 사안입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정교한 전략을 토대로 공세를 펴는데, 노동운동은 내부가 분열되어 있고 노분부상 지적대로 제조업과 공공부문에 냉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맞서려면 노동조합 역시 냉철한 자기점검과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데

'총력투쟁'이나 '총파업투쟁'을 고집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태현 사실 우리 노동운동에서 구조조정투쟁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정부정책의 기초를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주체 역량에서도 대우자동차나 한국전력에서 보듯 투쟁대오가 튼튼하게 꾸러지지 못했습니다. 노동운동 내부 연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성과라면 신자유주의와의 철저한 대결이 없었다면 힘들다는 의식, 전면투쟁에 걸맞은 동력과 대오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커진 점이죠. '총파업'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파업을 내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그나마의 교섭틀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힘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간에 갈등이 있었던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측면도 있습니다.

노진귀 구조조정투쟁은 쉬운 투쟁이 아닙니다.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공공부문은 독특합니다. 정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연대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김태현 구조조정투쟁은 구체적 성과가 나

오기 힘든 투쟁입니다. 그리고 정치투쟁이기도 합니다. 사안별 대응이 어렵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문제로 쟁점화해야 하는데 그럴 역량이 안되니까 사안별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한계를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는 듯 합니다. 노동만으로 안된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사실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서 노동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영역이 큼니다. 구조조정은 노동정책이자 산업정책이자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여론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고, 큰 문제들이 터지면서 작은 사업장들의 문제는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도처럼 노조가 대표적인 경우죠. 노동운동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이원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금융, 언론 등의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조직화 등



노진귀 한국노동 정책본부장

한국노동 차원의 입단투는 계획대로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노조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지도력에 혼란이 오면서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요. 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지난 1월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등 운동의 기초와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조합원들의 의식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던 비정규노동자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임영일 IMF 이후 기업별노조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직 대안으로 산별

노조 건설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산별노조가 정규직 중심 기업별노조를 통합해서 단일노조를 만드는 초보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건설 경로와 관련해서도 내부에 이견이 존재합니다. 금속산업연맹이 대표적인 경우죠. 다른 조건을 가진 조직들을 한 단위로 묶는 어려운 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원보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민주노동 산하조직들간의 통합은

활발한 반면,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은 오히려 쪼개져 지금 가맹조직수가 28개로 늘었는데요.

노진귀 아직 쪼개질 조직이 더 있습니다(웃음). 연합노련에서 쪼개져 나올 부문들이 있지요. 연맹위원장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노총 가맹조직수는 더 늘 수 있습니다(웃음). 하여튼 금육은 내년 연맹을 없애고 산별노조로 완전히 갈 겁니다. 자동차노련의 경우도 그 동안의 지역별교섭체계를 바탕으로 산별전환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역 혹은 산별교섭을 해 온 향운이나 선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수업은 공동교섭 경험도 있고 요금결정 등에서 정부통제를 단일하게 받는 부문이라 산별전환이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제조업은 여러 장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속이나 화학은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아내는 게 힘들지요.

김태현 민주노총에는 17개 가맹조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건의료, 대학, 전교조, 언론 등 6개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마쳤고요. 내년에는 공공, 금속, 택시가 산별로 전환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주요 조직들이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는 셈이 됩니다. 산별노조 건설에서 민주노총이 총괄·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를 강화해야 할 겁니다.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초안에

나와있듯 민주노총은 2005년까지 칠 개의 대규모 산별노조체제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임교수님 지적대로 산별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칙과 현실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보 이제 정치세력화로 논의를 돌려볼까요. 올해 한국노총은 '정채연합', 민주노총은 '독자정당'을 추진했는데 둘 다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전환이 필요한데요.

노진귀 우리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독자정당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호 후보' 전술이 많은 문제를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독자정당 흐름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해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의 지역분할 구조에서는 독자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어렵지요. 진보정당이 왜 안됐는지 원인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겁니다. 비슷한 시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론 안 될 거고요. 저는 사회구조 문제와 더불어 대중적 토대의 부족도 한 원인으로 봅니다. 아까 노동·시민 연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노동은 대중이 있는데, 시민운동은 대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대중은 잘 동원이 안 되고요. 저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당기간 연대체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별 노조체계라는 한계도 정치세력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현재의 국민적 지지도를 감안할 때 진장한 정치세력화는 상당기간 걸릴 겁니다. 선거 때만 나오는 정당이 돼서는 곤란하고 평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정치분자 중심의 좁은 문을 넓히고 대중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이유에는 당 색깔의 폭이 좁은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안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우선 일상적인 연대 활동, 부패방지법, 선거법 개정 같은 공동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물론 양대 노총이 같은 정당을 한다면 상승작용이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겁니다. 당선가능성도 높아질거구요.

김태현 현재의 정치구조는 보수정당 중심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호 후보' 전술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독자세력화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우리 노동운동에서 구조조정 투쟁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주체 역량에서도 대우자동차나 한국전력에서 보통 투쟁대응이 튼튼하게 꾸러지지 못했습니다. 노동운동 내부 연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구요.

물론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의석획득에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득표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패배이후에도 당원들을 확대하면서 당을 유지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지만, 이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수권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본부장이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합니다. 지금은 당 내부의 주체세력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 합니다.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이 강화되고 대 중투쟁이 힘있게 전개되면서 민주노동당과의

협력 내용이 채워져야 할겁니다.

임영일 민주노동당 내부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당이 자리잡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4.13총선에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정당으로서의 자기정립이 불가피합니다. 노동자 밀집지역 중심으로 먼저 뿌리를 내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선에서 울산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당내부 정치그룹들간의 내립으로 실패했습니다.

창원의 경우 당선에 근접하는 표를 얻었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의 주도적 역할로 노동자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눈여겨볼 점은 총선 이후 패배감이나 정치적 분열이 거의 없고 당의 지역토대 구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것은 당대표가 후보였다는 점과 노동자밀집지역이라는 점, 집권당 취약지역인 영남이라는 점, 상대후보가 약세였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크게 활약했는데 시민단체와 연대를 어떻게 맺어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 봅니다. 총선을 계기로 시민운동 안에서도 시민운동의 독자세력화나, 아니면 진보정당과의 연대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민중연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4.13 총선을 거치면서 시민연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중연대의 유효성 여부를 고민할 과제가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당체계개편 전략을 보면 민중연대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원보 두 노총이 정치세력화 입장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중토대 확대, 주체확립, 노동자의식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과의 연대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구조

조정 등에서 시민운동과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도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볼까요?

김태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보장 등 사회개혁 과제는 시민단체와 많은 연대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공기업 민영화, 연금법개악 등에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민중연대가 중시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소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반대가 우선 과제여서 민중연대가 중시된 거죠. 하여튼 시민단체와의 관계복원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중요 쟁점들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귀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노동운동이 시민운동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렬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공통 이슈를 개발해야 합니다. 입장 차이는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이 조합적 이해관계를 넘어 폭넓은 전망을 갖고 국민의 보편 이익을 위해서 나간다면 시민운동과의 연대 영역도 넓어질 겁니다. 노동운동이 국민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면 안되지요.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이 교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원보 정세도 불리하고, 자체역량도 한계와 모순이 드러나고 참 어려운 상황입

니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두 노총이 새 전략을 만들어 노력한 해였습니다. 21세기도 바로 코앞에 다가왔고요. 시작은 한국노총이 먼저 했는데, 각공은 민주노총이 먼저 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난관을 헤쳐가기 위한 운동의 몸부림이자 긴박감의 소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조직인 이상 내부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당연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텐데요.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김태현 사실 민주노총은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총화입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노동운동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낡은 틀을 걷어내고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십과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었고, 이 속에서 발전전략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운동노선은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주의', '대안사회의 상은 '평등사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정책과제와 조직



임영일 경남대 교수

양 노총이 내부 조직력을 강화하고 당연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분리된 힘만으로는 지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혁신과제도 담았습니다. 이념과 노선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조직 전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짧은 운영기간, 백화점식 논의, 그리고 지도부 입기와 맞물리면서 원활하고 풍부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면 될 듯 합니다.

노진권 한국노총의 21세기위원회 활동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초안 작성과정에 있습니다. 조직토론회와 건

문가 의견청취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대중토론회를 거친 후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운동기조와 관련해서는 '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 갖고 논쟁하다 시간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실용적 접근을 우선할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노총은 조직적으로 '주의'를 놓고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주제역량 강화와 정책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임영일 저 역시 민주노총의 발전전략위에

참가했었습니다. 안팎의 변화가 거세고 노동운동이 위기상황에 처하면서 기존 운동기조를 넘어서는 새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노조운동(New Unionism), 미국노총의 새 목소리(New Voice),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94년에 새 전략을 구상했지요. 남아공 역시 정권교체 후 노동운동의 전략을 새로이 모색하는 작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장성에 있는 거지요. 제가 민주노총 중앙과 함께 사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활동 전에도 물론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활동 후에는 이런 판단이 더 강해졌습니다. 총연합단체와 산별연맹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노동운동 내부적으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적 합의가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논의가 모아집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민주노총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동기조를 만들자는 내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념, 대안사회, 이행문제, 강령, 정책 등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공세 극복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과제를 전략위원회가 정

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역토론회에서 어떤 이들은 이념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 구체적인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현재의 결과는 완성물이 아니라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체 의견을 처음으로 모아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원보 올해 구조조정반대투쟁과 제도개혁투쟁이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전임자임금지급문제, 복수노조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제로 놓여있지요. 이 문제들은 회관계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양대노총의 연대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전력노조의 파업철회 이후 철도노조의 요구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모처럼 시작된 공동투쟁체제가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진귀 공동투쟁 문제는 역할분담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동투쟁 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교섭은 독자적으로 하면서 투쟁은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공동투쟁을 하면 상승작용이 일어날거라 판단했는데 12월 5일 집회에서는 상승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력노조 건도 겹치면서 우리 내부에서 공동투쟁을 지지하는 쪽의 입지가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이번 두 노총의 공동투쟁은 공공 부문에서의 부문별 연대가 노총 차원의 연대로 올라온 측면이 큼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점은 핵심동력이었던 전력노조가 주저앉았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면서 공동투쟁의 빛이 바랬습니다. 양대노총이 당면 쟁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생존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동투쟁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연대가 이뤄지자 위해서는 사안별/부문별 연대를 발전시켜야 할겁니다.

이원보 마지막으로 내년 전망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DJ 정부는 집권후반기고, 경제도 하락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듯합니다. 노동운동 역시 '지련의 한해'를 보낼 게 분명해 보이고요.

임영일 멕시코 사례를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짧은 점에서 한국과 다르지만, 국제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 요구가 관철되면서 국내 경제정책이 무력화되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 사실 94년 멕시코 위기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연장선에서 발생했습니다. 94년 이전부터 살리나스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급격히 추진했고, 그 결과가 멕시코에 치명적이었지요. 결국 살리나스는 미국으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음과 동시에 그 결과로부터 이미 영향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산업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구조조정이 마지막으로 공공부문과 사회간접자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반적인 추세죠. 제조업 생산의 30%, 금융거래의 50%가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그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와 더불어 그 결과가 작동할 경우 나타날 문제가 대두할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경제 안에서 통제할 수 없는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반복이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이런 신자유주의 흐름을 막는 게 중요한데요, 비록 취약하긴 하지만 노동세력이 그 중심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동요도 커질 거로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자유주의 기조를 후퇴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집권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할거로 예상됩니다. 이런 정부정책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평장히 어렵겠지만, 우선 양 노총이 내부 조직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 노총의 분리

된 힘만으로는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직노동이 미조직부문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태현 임교수님의 전망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4대 부문 개혁을 내년 2월까지 끝내겠다고지만, 누적된 기업부채와 부실한 금융부문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것은 명확합니다. 자본은 경기후퇴를 빌미로 노동조건 개악 공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실업과 빈곤문제가 악화될 것입니다. 집권층은 김정일 위원장 담판 등의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상황 반전을 시도하겠지만, 권력누수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초안을 잡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저지', '생존권 쟁취', '산별노조 건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기조로 잡을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도력 강화를 이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계단의 힘으로는 막아내기 힘들므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꾸려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지원받는 연대에서 지원하는 연대로 나아가길 계획입니다.

노진귀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이 지속될 듯 합니다. 올해 과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노사정 위원회에서 교섭을 통해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노동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성 확보'라는 세 가지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노조 등 노동기본권 부문과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 쪽으로 고민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이원보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황이 그리 낙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도 노동운동의 과제인 듯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조직 안팎의 도전들이 올해 못지않게 드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운동이란 용기를 갖고 만난(萬難)을 두릅쓰는 가운데 희망과 길을 찾아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역시 운동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서로 작은 힘이나마 연대에 하나로 모아가는 게 내년의 과제로 정리된 듯 합니다. 긴 시간 토론 감사드리고, 오늘의 토론이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